

의안번호	2200677
의 퇴 인	이병진의원
회 답 일	2024. 6. 25.
추계번호	24B0946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·제도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·연구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5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5억원(연평균 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안 제24조(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촉진) - 북한의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·연구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제3항 신설(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촉진)	정부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북한의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·제도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·연구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4조제3항 신설 (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촉진)	○	• 유사사례 참고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: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촉진(안 제24조)

- 개정안은 정부가 북한의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·제도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·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본 추계는 북한의 해양환경 관련 조사·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해양수산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해양수산부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42조¹⁾에 따라 2022년부터 ‘남북수산협력 연구과제지원’ 사업²⁾을 통해 남북한 수산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예산을 지원하였음
 - (목적) 북한의 수산업 실태, 남북 수산협력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추후 남북 수산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
 - (사업기간) 2022~2023년
 - 2022~2023년 예산: 각 5억원(국비 100%)
- ※ [참고자료] 남북수산협력 연구과제 지원 참고

1)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42조(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·연구)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, 어업제도, 수산물유통제도, 수산업 생산기반, 수산업 과학기술, 수산업 경영지도, 수산인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·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2)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(3431-301)의 내역사업

[표 2] 남북수산업협력 연구과제 지원 예산 현황: 2022~2023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2	2023
예산	500	500
연구과제	• 북한 수산업 현황 및 정책 변화 •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신정부 남북수산업협력 방안 연구 • 서해 특정수역의 어선어업 조업 실태와 경영 조사 • 북방한계선(NLL) 인근수역의 어업관리에 관한 남북협력	• 북한 경제특구를 활용한 남북수산업협력 방안 • 양식업 분야 남북수산업협력 방안 • 국제기구를 통한 수산부문 남북협력 방안 • 남북한 수산업 제도 및 정책의 이질화 해소방안 • 북한해역 수산자원 조성사업 협력 방안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「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Ⅱ-1)」, 2023.1.

- 따라서 동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북한의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·제도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·연구 비용은 연간 5억원으로 가정
 - 이때, 추계기간 동안 조사·연구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 결과, 정부가 북한의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·제도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·연구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5억원으로 추계됨

[표 3] 북한의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·연구비용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북한의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·연구비용	500	500	500	500	500	2,500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해양수산부 내 남북수산업협력 연구과제지원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이유미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] 남북수산업협력 연구과제 지원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□ 추진 개요

- 북한의 수산업 실태, 남북 수산업협력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추후 남북 수산업협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
 - * 「수산업기본법」 제42조)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 및 기반, 어업 및 유통제도, 과학기술, 경영지도,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여야 함

□ 사업기간 / 예산: 2022~2023년 / 국비 100%

- '23년 예산요구: 남북수산업협력 연구과제 수행 500백만원 반영
 - (산출근거) 1식 × 500백만원 × 국비100%
 - * 북한 양식품종 현황 및 양식분야 기술 교류방안 연구 지원

□ 보조사업자: 수협중앙회

□ 주요 연구과제

- ① (북한 수산업 실태조사) 북한의 해양환경, 수산업 관리체계, 수산정책 변화, 수산업 및 수산물 무역 현황, 중국 의존 실태 등
- ② (신정부 협력방안) 시대별 남북협력 방향, 수산부분 남북합의사항 분석·평가, 수산업협력사업 추진계획, 민간 협력방안 등
- ③ (NLL 어업관리) 공동어로수역 이행, 어로활동 안전 대책, 서해 한중 잠정수역 운영과 대중국 불법어업 관리 등
- ④ (서해특정수역 실태조사) 남북 접경수역의 어업관리, 접경수역 어업경영 실태 및 어업인 의견 조사 등

□ 지원의 필요성

-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민간부문의 교류 필요 및 사전적 차원의 연구 수행 필요
 - 수협은 대표적인 수산업단체로 남북협력사업 추진 시, 실제 사업수행의 최적 조건으로 연구와 사업수행의 연계성 확보 용이

- 해양·수산 분야는 육상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찰이 적고, 공동어장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경제 사업 등 수행이 용이
 - 공동 연구·조사를 통해 경제 및 식량문제 동시 해결 가능